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추진방안'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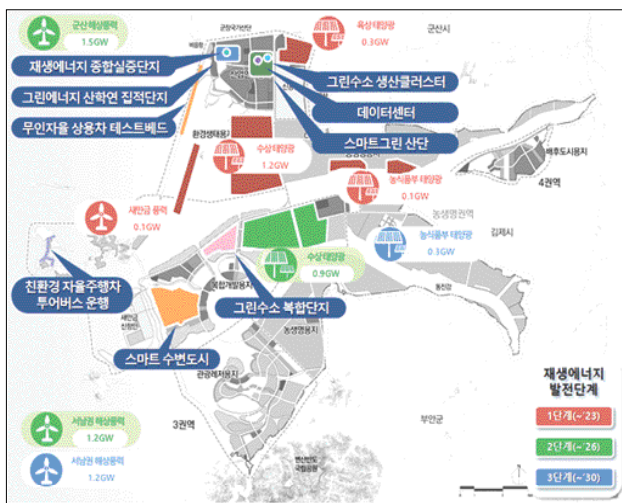
국내 최초 새만금에 'RE100 산단' 구축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7GW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 조성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위한 기반 마련

2024년까지 지능형 전력망 등 갖추고
산단 내 전략산업 유치 투자진흥지구 도입

지형정보 디지털화 통한 디지털 트윈 구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스마트 서비스도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사업 위치도

(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RE100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선도시업을 추진해 2022년까지 30MW급의 태양광 단지와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을 직접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유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한다. SK가 약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100MW 규모의 RE100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7개국을 연결하는 SIC(Southeast Asia Japan Cable 2) 해저통신케이블을 설치해 해외 정보교류의 관문으로 활용하는 한편, FAANG(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 등 글로벌 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새만금을 그린에너지 싱크탱크로 육성하기 위해 그린에너지 산학연 집적단지를 조성 중이며, 그린에너지 통합운영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새만금 전담조직 설치도 검토한다.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주요 명소를 연결하는 '친환경 자율주행 투어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모빌리티 기술 증진을 위한 무인자율 자동차 테스트베드(시험대)를 구축하며, 체력·교육·홍보 기능을 갖춘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한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또 공공이 주도해 도시 기반시설,

건물 등에 디지털 기술과 그린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그린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린 수변도시 내 유휴용지, 건축물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자립을 추진한다. 지하 구조물과 지형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고령화,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 변화에 맞춰 수요응답형 자율버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한다.

새만금의 중심부에 위치한 국제협력용지에 그린수소를 생산·유통·활용하는 도시·산단의 선도모델을 구현한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2030년 기준 공공건축물 의무설치비율인 40%를 선제적으로 적용해 새만금청 현 입주건물, 새만금박물관 등의 기존 공공건축물은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 40%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2024년부터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재생에너지를 40% 이상 사용토록 의무화한다.

양창모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 낼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만금에 한국판 뉴딜이 실현된 저탄소 디지털 기반의 미래모습을 하루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창모)은 7일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를 통해 열린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의 결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종합적 성과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새만금을 '그린+디지털 뉴딜'의 테스트베드(시험대)로 활용하는 중장기 추진방안이다. 새만금은 그린에너지, 스마트그린 산단 데이터센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가 계획돼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이며,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와 산단과 도시 인근에 위치해 '그린뉴딜 선도시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새만금에 미래사회의 종합 실증모델을 성공적으로 마련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을 친환경·저탄소 경제 기반의 선도국가로 대전환하는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새만금 권역에 약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그린에너지 종합 실증시설과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2023년부터 육상태양광 0.3GW, 수상태양광 1.3GW, 풍력 0.1GW 총 1.7GW를 시작으로 단계적 발전을 개시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 2.8GW, 풍력 4.0GW 등의 발전단지를 조성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한다. 재생에너지의 생산부터 공급 활용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 실증할 수 있도록 지능형 전력망과 디지털트윈 기반의 가상실증 플랫폼을 구축해 에너지 생산자에서 소비하는 방식인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올 2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신청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열력지구)를 조성해 연 1.5만 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를 구축하고 기업 집적단지과 통합지원센터 등을 조성해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현대차 IC전자 등 민간기업과 함께 그린수소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증과 3MW 규모의 태양광 수전해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연료전지 등의 시설을 활용한 시범 사업을 추진해 관련 분야의 사업화를 최대한 앞당긴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최초 RE100 기반의 스마트그린 산단과 디지털·그린에너지 등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2년 3월까지 새만금 국가산단 5·6공구를 산업유치법에 따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국내 최초 직접거래 방식의 RE100 전력구매계약 선도시업을 추진한다. 또, 2024년까지 지능형 전력망과 스마트 물류·교통,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갖추고, 산단 내 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투자혜택)가 주어지는 투자진흥지구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유수면 점·사용료, 새만금개발청사의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을 검토해 RE100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감축과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연일 '강행군'

최훈 행정부지사, 문체부 보건복지부 등 찾아 건의

부처단계 예산 최대 반영 이달 중에도 부처 방문



최훈 행정부지사는 7일 세종정부청사를 재차 방문해 부처예산 최대 반영을 위한 전략적인 포석활동에 매진했다.

정북도가 중앙부처 예산편성이 본격화되는 4월 한 달을 국가예산 확보 중점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지휘부들 중심으로 연일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도는 지난 2일부터 실·국별로 사전에 부처별 국가예산확보 활동 후,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업 현안사업 등 쟁점이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 최훈 행정부지사, 31일 우범기 정부부지사의 릴레이 활동을 한 바 있다. 7일도 최훈 행정부지사가 세종정부청사를 재차 방문해 부처예산 최대 반영을 위한 전략적인 포석활동에 매진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여행체험 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비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고,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2023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1년 연기사 등 변동된 여건을 반영하고, 품격있는

대회 운영 및 성공개회를 위해 총사업비를 당초 75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변경 증액을 요청했다. 아울러, 새만금 방조제에 국내 최초, 최장의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 제공을 위해 '새만금 실감형 콘텐트 Field TEST 센터 구축'사업에 국비 20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학대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비 등으로 국비 6억원, 학대피해아동쉼터 국비 5억 원 반영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를 방문해 국립공원의 효율적 운영 및 신속한 업무처리

를 위해 더유신을 기존에 중부지역본부에서 서부지역본부로 권역조정 후 서부지역본부를 전북도 내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진행 중인 익산 잠정마을 지역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운영결과를 활용,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강농산 부지활용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정부부처 예산안 편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송하진 도지사를 중심으로 도정 역량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최우선을 두고 총력 매진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통시장 지속 발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민주 김수홍 의원, 익산 서동시장 등 주차환경개선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 갑)이 20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익산에서 신청한 서동시장, 익산 북부시장 2곳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익산시는 서동시장과 북부시장 두 곳의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전국 공모에 도전했고, 중소기업벤처부의 심사를 거쳐 7일 최종 선정됐다. 구도심에 위치한 서동시장의 경우 기존 51면의 주차장이 있지만 진입로가 협소하고 인근 마트의 주차장 진입

로와 나란히 있는 점, 취급품목에 따른 수유,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북부시장의 경우 상시 유동인구에 비해 주차대수(107대)가 턱없이 부족해 인근 노상까지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으로 서동시장에는 19억1,000만, 북부시장에는 21억이 투입되며,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익산시와 전북도 중소기업기업부 등 유관기관에 서동시장과 북부시장의 주차환경 개선 필요성을 적극 개진해 두 곳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김수홍 의원은 "구도심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며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필두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전북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

"누구라도 무료로 진단검사 받도록 할 것"

정 총리, 전북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서

도,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등 특별대책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전북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영상회의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대응상황 보고 전북도, 서울시 경기도의 조치사항 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보고에서 최근 환자 발생 현황과 추이 분석, 주요 방역 조치 사항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전북도의 주요 방역조치로는 전주, 완주(이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임시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기본방역수칙 업소용 포스터 제작·배부·계정 일괄 지원, 유홍시장 5중,

노래연습장 지자체·경찰 합동점검 시행을 설명했다. 특히, 도는 의료기관·약국 방문한 사람 중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동해 지역사회 감염원과 차단에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본방역수칙 업소용 포스터 제작·배부·계정 일괄 지원은 매출이 감소한 어려운 업소에 포스터를 제공하게 하는 일반적인 조치보다는 직접 제작·이용 가능인원 기재, 배포하는 윈스톱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감염이 지난주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생 각하는 것보다 코로나19는 일상 곳곳에 훨씬 가까이 침투해 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지지 않도록 신속한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통해 확산을 차단해 총력을 기울여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하루하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문가와 함께 지

혜를 모아 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추가 대책도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지쳐 계시지만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 주변의 이웃을 지켜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역에 힘을 모아주시길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또 증상 유무에 따라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시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거리두기 단계나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무료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역사회 저변에 숨어 있는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송 지사는 또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완성 전까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선제검사를 통해 확산을 차단해 총력을 기울여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하루하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문가와 함께 지